

농협 조직개편(신경분리)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정부의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시안)

지난 1월 25일,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1월 25일(광주), 26일(대구), 30일(청주) 및 2월 1일(수원)에서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3월내에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1월 19일 첫 번째 신경분리위원회가 개최된 후, 1년여 동안의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통해 윤곽을 잡아 나가는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분리 형태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 별도법인
출자 형태	중앙회가 경제사업, 신용사업에 각각 100%씩 출자
분리 시한	1안 : 10년~12년 2안 : 진행 과정 따라 추후 결정
필요 자금	12조 3,881억~13조 7,305억
추가자본금 조달	일선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자력으로 매년 8,250억원씩 확충

(표 1)을 보면 2005년 7조 2,610억인 농협중앙회의 총자본금을 5조 1,271억원~6조 4,695억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추가자본금의 확충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은 물론 BIS 자기자본 비율을 10% 이상 유지함으로써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매년 8,250억원씩 추가자본금을 확충하더라도 신경분리 시한은 최대 15년 정도가 걸린다는 1안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분리 시한을 추후 결정하자는 2안도 제출된 것이다.

지역 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신경분리 형태와 출자 형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중앙회가 경제사업, 신용사업에 100%씩 출자하면 일선 조합의 참여가 제한되는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표 2)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표	2015년까지 산지유통의 60%(18조원) 담당(중앙회 14조, 일선조합 직거래 4조)하여 판매중심 농협 실현
회원조합 자금 지원	무이자(4조원) 및 저리자금(3조원)을 지원하여 조합 판매사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추진
투자	도소매 유통사업(6조원) 투자, NH 식품 신설
기금 설치	경제사업 안정화 기금 설치
사업 평가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위원회(농협중앙회 내에 설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이자 및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도소매 유통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 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지원 기능 강화와 사업 경합 해소 등의 조치는 미흡하고,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수익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농림부는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농협중앙회 안에 설치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자칫 농협중앙회가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일부러 지연시키며 면죄부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핵심 관건은 농협중앙회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의지에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07”에 의하면, 한-미 FTA와 DDA 농업협상 등으로 농업 GDP가 정체·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속에서 국내외 농산물 유통·금융 부문의 시장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유지해 온 신용사업 위주의 기존 수익 구조가 위협받고 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최종 소비식품 형태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우리 농업의 다각화와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대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형화된 정책대행사업과 자체 사업의 운영·관리 위주로 짜여진 현행 농협중앙회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시장 여건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중심적인 조직·사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신경분리 시한 확정 불가하며, 신경분리의 문제점만을 논하여 농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최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은 외면한 채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과 종합금융그룹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행보는, 재정경제부의 조기 신경분리 주장에 오히려 명분을 보태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제라도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를 명확히 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품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자기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수익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중복?과잉 투자의 문제점은 물론 일선 농협 및 농민조합원과의 불필요한 경합 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개편 방안은 1,250여개의 일선 농협과

농민조합원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연합회적 기능 강화가 급선무다.

(2)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방안의 문제점

최근 재정경제부는 2013년까지 농협중앙회를 신경분리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독기관을 농림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수협중앙회가 부실화 된 후, 신용-경제사업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의 신경분리와 매우 유사한 것이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방안이다.

이러한 안을 가지고 정부는 3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를 보고사항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농연 및 농업계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개혁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 조직은 물론, 우리 농업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신경분리를 선불리 추진할 경우,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은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일선 조합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농협법의 부칙 제12조에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를 농림부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협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된 최근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항마저 정면으로 배치되는 월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서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부의 지도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조직개편 관련 한농연의 요구사항

(1)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관련 개선 요구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자본금을 추가 출연해야 함

- 일선 조합이 평균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무이자자금 지원이 없다면 900여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현실을 감안)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필요자본금을 추가 출연하여(정부 : 1,000억원, 조합 : 1,200억원, 중앙회 : 6,000억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필요자본금 추가 출연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임

○ 조직개편(신경분리) 완료 시한을 7~8년으로 확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개혁 조치를 앞당기기 위해, 조직개편(신경분리) 완료 시한을 앞당겨 7~8년으로 확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농림부 산하에 설치·운영해야 함

- 해당 위원회를 농협중앙회 내에 설치하여 간사 역할까지 부여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됨(2003년 농협개혁위원회 파행 운영 사례를 참조)
- 이 때문에 농림부 산하에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차관 및 민간 추천 전문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야 함

(2)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개선 요구사항

○ 산지유통조직 강화를 위해 사업 및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함

- 공동계산제 실시 등 내실 있는 산지유통조직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가격·수급안정대책, 신규 거래처 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위주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부서를 품목별 전문 지원 조직으로 재편하고, 분사와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일선 조합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함

○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 원리와 운영 실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